

우리사회의 저출산, 우리가 할 일은?

조복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현재 사회체제의 존속이나 유지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이 대체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존속되지 못하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부족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우선 인구학적 측면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피부양자가 급증하여 후세대의 부담이 문제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과거 가족계획을 위하여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며 주장되던 표어들은 현재의 젊은 부부에게도 공감을 주는 메시지가 된 것이다. 성공한 정부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출산을 사회적 위기로 인식한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5년마다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2차(2011년-2015년)에서는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 제3차(2016년-2020년)에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독특한 교육열과 교육환경으로 인한 과중한 육아비용,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없는 여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서의 고비용 구조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양(자녀 수)과 질(인재)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요당하게 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부모는 출산율 줄이면서 교육투자를 경쟁적으로 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대학교육까

지 이수하고 어엿한 전문직을 가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모는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영유아기로부터 20년 이상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첫 자녀 출산 이후 자녀를 더 낳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취학 전 영유아 중 8.8%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반면, 39.6%는 민간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 교육·보육부터 공적 체계 내에서 책임질 수 없는 구조 하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불평등한 교육·보육 경험을 하게 되므로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영유아기의 교육·보육이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현실에서는 부모들의 교육열에 부합하는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의 육아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생애초기부터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보육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그 대상 연령을 하향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는 양질의 공교육·보육을 통해 고액의 자녀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때만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